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9-67
----------	------

제출년월일 : 2022. 11. 9.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 조례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적응대책을 강화하여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

☐ 주요내용

- 지역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2조)
 - 국가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비율로 정함
 - ※ (국가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비율만큼 감축
- 안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안산시탄소중립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안 제14조)
 - 지역별 온실가스 관련정보 및 통계 작성 의무에 대한 규정 마련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안 제19조)
 - 안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센터를 지정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제정조례안 : 불임1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3

※ 비용추계서 첨부

☐ 사전예고(결과) : 붙임4(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22. 09. 16. ~ 2022. 10. 06.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5

< 붙임 1 >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안산시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안산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안산시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안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안산시감축목표로 한다.

④ 시장은 안산시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산시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안산시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안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안산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산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 가.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유고 시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 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0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장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시 관할 지역 내 기관
·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
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소관 실·과		환경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환 경 정 책 과 장 최 미 연
	담당·팀장 직위·성명	기 후 변 화 대 응 팀 장 김 학 응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정 은 (행정 2839)